



# 주간 통일정세

2012-37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軍군악단 연주회 관람(9/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조선인민군 군악단 연주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이 지도에서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기상이 맥박치는 군악을 연주할 수 있게 연주기법과 형식을 우리 식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복장도 더 잘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함.
  - 이어 "조선인민군가를 들으면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 조국통일대전의 날이 오면 인민군군악단의 혁명군악을 높이 울리며 진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北, 2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개혁조치 주목(종합)(9/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3일 결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밝힘.
  - 또한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대의원 등록은 9월23일과 24일에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부부, 이번엔 평양 가정집 방문(종합)(9/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평양 중싱가에 있는 일반 가정집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과 리설주는 평양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 새로 입주한 평양기계대학 교원, 노동자, 신혼부부 가정 등을 찾아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가정집 방문에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北, 문선명 총재에 조국통일상 수여(종합)(9/7,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3일 별세한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조회를 보냄.
  - 조선중앙TV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수령님(김일성)과 장군





### ■ 김정은동향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조선인민군 군악대 연주회 지도(9.3,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현영철(총참모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최부일·박재경·김영철(대장들), 박정천(중장), 황병서(黨 부부장) 등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황해북도 양로원과 육아원·애육원들에 '식료품과 의약품'을 선물로 전달(9.3,중방)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9.5 문선명(통일교 총재, 9.3 사망) 유가족들에게 '애도 표명' 弔電(9.5,중통·중방·평방)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창전거리 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 가정방문(9.5,중통·중방·평방)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원산농업종합대학 박사 김우범과 봉화화학공장 지배인 신재완에게 80·90돌 '생일상' 각각 전달(9.5,중통)
- 9/5,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전승기념관' 건설 명령(전승 60돌인 '13.7.27까지 완료)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9.5 최룡해·김정각 등 참가下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 앞에서 진행(9.5,중통)
- 9/7, 김정은 黨 제1비서, 9.7 故 문선명(통일교 총재, 9.3 사망) 유가족에게 화환 전달(9.7,중통·중·평방)
  - 화환을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과 김양건(黨 비서)이 유가족인 문형진(문선명 7男·장례위원장, 세계평화연합 세계회장)에게 전달.
  - 고인의 유가족과 장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9.7) 개성을 통과, 평양에 도착.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 국가와 우당·종교단체·관계기관 일꾼 등, 9.7 세계평화센터 弔意 방문(9.7,중통·중·평방)
  - 문형진과 장의위원회 관계자, 평양에 있는 유가족들 참가.
  - 문선명에게 '조국통일상'(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664호', 9.6 발표) 수여, 9.7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서기장) 및 고인의 유가족 등 참가下 만수대의사당에서 문형진에게 전달(9.7,중통·중·평방)
- 9/8,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민속공원 시찰 및 공원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9.8,중통·중·평방)
  - 최룡해, 장성택, 김정각, 최태복,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김경옥,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마원춘 등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통일거리운동센터(김정은 직접 발기·구상, 연건축면적 : 1만3,749㎡) 현지도(9.8,중통·중·평방)
  - 최룡해, 김정각, 김경옥,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등 동행
- 9/9, 김정은 黨 제1비서, 9.9 0시 黨중앙군사위·국방위·최고사령부 작전지휘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아버지에게 경의표시(9.9,중통)





"시범구의 경지 면적은 560여 정보"라고 보도함.

- 또한 "조중(북중) 두 나라 농업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벼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작황이 매우 좋다"며 "온실에서 지난 6월 말 파종한 토마토와 오기, 가지 등의 남새(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고 덧붙임.

#### ● 北, 양각도호텔 골프장 없애고 새 시설 건설중(9/7,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양각도국제호텔 앞에 만든 골프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 '노스코리안 이코노미워치(North Korean Economy Watch)'가 구글어스의 새로운 평양지역 고해상도 위성사진(2012.6.21 촬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동강 양각도에 있던 양각도국제호텔 골프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 이 사이트는 사진 설명에서 "이 자리에 현재 새로운 종합복지센터(new health complex)가 건설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함.

#### ■ 기타 (대내 경제)

- [사설] 현 시기 '김정일애국주의자로 키우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합법칙적 요구, 인간육성사업"이라며 '주민 김정일애국주의 사상교양사업과 정신무장' 독려(9.4, 중방·노동신문·중통/모두 다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9.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9월25일 평양에서 소집 및 9월23·24일 대의원등록 공시(9.5, 중통·중·평방)
- 北, 정권 수립일(9.9) 6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진행(9.8,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립(내각총리/보고),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박도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문경덕(평양시당책/사회),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류미영 등 참가

#### 다. 사회·문화

#### ● 北의 자전거 '예찬론'..."건강·환경문제 해결"(9/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가 최근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부쩍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함.
- 통신은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더불어 더욱 친숙해지는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자전거 타기가 널리 장려되고 있다"며 "자전거는 운동과 건강에도 좋고, 교통 및 에네르기(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해결에도 이롭다는 것이 누구나 꼽는 우점(장점)"이라고 소개함.



- **北, 대학생 대상 TV 채널 편성(9/5, 조선중앙TV)**
  - 북한은 '교육절'을 맞아 5일부터 기존의 교육문화TV 채널을 평양 시내 대학생 대상으로 한 룡남산TV 채널로 전환해 방송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전함.
  - TV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35돌이 되는 9월5일 오늘부터 교육문화텔레비전방송을 수도(평양)의 대학생을 위한 룡남산텔레비전 방송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방송에서는 대학생들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인재로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편집물을 기본으로 방영하게 된다"고 밝힘.
  
- **北 노동신문, 태풍 피해 복구노력 집중 보도(9/7, 노동신문)**
  - 북한이 지난달 말 전역을 휩쓴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7일 전함.
  - 신문은 7일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비철금속 생산기지로 유명한 함경남도 검덕지구 등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으며, "태풍 15호에 의해 검덕지구에서 커다란 피해가 났다"고 전함.
  -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피해 현장에 군인들을 보내는 등 복구 활동이 필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민군 부대 및 당 위원회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함.
  
- **北도 녹색산업 박차... "경제강국 건설에 중요"(9/9, 연합뉴스; 경제연구)**
  - 북한의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 최신호(7월30일 발행)는 '현시기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폐기물을 재생해 생산에 널리 이용함으로써 많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미리 막게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논문은 공장, 기업소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원료, 연료, 자재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며 폐지, 폐강철의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北中, 나진항~원정리 도로 이달 개통식(9/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통로로 떠오른 북한 나진항과 원정리 사이의 도로가 이달 정식으로 개통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통신은 4일 "조중(북중) 두나라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의 하나인 나진항~원정리 도로가 개건됐다"며 "개통식이 9월 경 진행될 예정"이라



고 밝힘.

- 원정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이며, 이 도로의 총 길이는 50여 km이고 너비는 평균 9m(최고 16m)라고 전함.

● **北, '중시양그룹 北투자 쪽박사건'에 이례적 반박(9/5, 연합뉴스)**

- 북한은 5일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양그룹에 더욱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날 합영투자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과 분쟁과정을 파헤쳐보면 서양집단에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이행정형을 놓고 볼 때 서양집단에 더 치명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해석된다"고 밝힘.

● **北회령~中싼허 국경다리 보수 완료(9/5,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와 중국 룡징(龍井)시 싰허(三合)를 잇는 국경 다리가 전면 보수돼 지난달 말 재개통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신문망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룡징시는 2009년 12월 회령시와 다리를 전면 보수하거나 새 다리를 놓는데 합의했지만, 공사비 부담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보수작업은 올해 2월 시작되었으며, 공사비는 중국 측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짐.

● **美민간인 20여명 지난주 방북..산업시설 등 시찰(9/5,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의 기업대표 등 민간인 20여명을 초청, 산업시설을 비롯해 대학, 박물관, 협동농장 등을 돌아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미 민간연구소 태평양국제정책협의회(PCIP)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럴드 D. 그린 대표를 비롯해 지방정부 및 기업 대표와 투자자 등 23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힘.

● **北 "日 납치문제 의제수용 주장은 허튼소리"(9/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본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튼소리'라며 공식 부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은 "이번 예비회담에서는 일본인 유골문제로 열리게 되는 조일 정부 간 본 회담과 관련한 쌍방의 입장이 통보되고 본회담의 의제와 급수, 장소, 시기 등 실무적인 문제가 논의됐으며 앞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계속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정계, 보도계(언론)가 본회담 의제에 납치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





다스니, 우리가 일본인 유골문제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니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튼소리"라고 일축함.

- 이어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선의를 우롱하는 이런 여론 기만행위는 일본 측이 일본인 유골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질게 해줄 뿐"이라면서 "일본이 계속 불순한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조일 정부 간 대화가 이어지는 데 부정적인 후과(영향)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쿠바, 평양서 2년 만에 군사회담(9/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쿠바의 군사대표단이 6일 평양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회담에는 북한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군 장성 등이, 쿠바에서는 호이킨 키타스 솔라 혁명무력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주북 쿠바대사관 무관 등이 참석함.
-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의사를 표명했으며 호상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北서 주문 생산 유럽 의류업체 늘어(9/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의 유명 의류업체들이 값싼 노동력과 세련된 제작기술을 가진 북한에 주문 생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네덜란드의 대북투자 전문 자문회사인 GPI컨설팅사사의 폴 치아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독일의 게리 베버(Gerry Weber)와 네덜란드의 C&A사 등 다양한 의류업체들이 1980년대부터 북한에서 주문생산을 해오고 있다고 밝힘.

● **北, 황금평 해외마케팅 본격화(종합)(9/7,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공동 개발 중인 황금평 경제특구에 대한 본격적인 해외마케팅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북한은 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8회 지린·동북 이투자무역박람회의 '조선(북한)의 날 및 중·조무역투자프로젝트상담회' 행사에서 황금평의 개발계획과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우대정책을 소개하며 투자 유치에 주력함.
- 북중이 공동 설립한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장즈첸(張芝遷) 부주임은 이날 행사에서 "전체 면적이 14.4km<sup>2</sup>에 이르는 황금평은 산업, 문화, 서비스의 '3대 기능'과 복장가공, 현대식농업, 전자정보, 문화, 상업·무역서비스의 '5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北中, 경제특구 세금감면·비자면제 협상 중(9/8,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과 나선 경제특구에서의 세금 감면과 비자 면제



-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전날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의 북중 무역투자프로젝트상담회 행사를 전하면서 이런 정부당국간 협의내용도 소개함.
- **北, 日공안위원장 '고노 담화 수정' 주장 비난(9/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일본 내각의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 겸 공안위원장이 '고노 담화' 수정 주장에 대해 "무도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피해 여성들의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하는 야만적인 처사이며 성노예 문제를 어떻게든 덮어버리려는 저열한 행위"라고 맹비난함.
  - 논평은 "지금껏 표면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고노 담화의 계승이라는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전면 부정하려는 망동"이라며 "과거 죄악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일본은 언제 가도 역사와 인류 앞에 파렴치한 나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함.
- **日, 10일 국장급 교섭 타진..北 불응(9/9, 교도통신)**
- 일본이 북한에 국장급 교섭을 서둘러 열자고 타진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에 '9월초'나 10일에 국장급 교섭을 열자고 제시했으나 북한은 지난 7일까지 일본측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일정 조정은 난항을 겪고 있음.
- **푸틴, '정권수립일' 맞은 北김정은에 축전(9/9,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9일 '정권수립' 64주년을 맞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국경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4돌을 즈음해 축하를 드린다"며 "러시아와 공화국 사이의 관계는 친선과 존중의 공고한 전통에 기초해 성과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9.4 불록불가담(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및 이란 공식친선방문 후 귀국(9.4, 중통·중방)
- 北 외무성 비망록(8.31), 9.7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2-680호'로 배포(9.9, 중방)
- 비망록 :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 포기는 핵문제 해결의 선결조건, '미국의 실지행동에는 화답할 것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핵억제력이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





### 3. 대남정세

- **北 김정은, 문선명 총재 별세에 조전(종합2보)(9/5, 조선중앙통신; 평양 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별세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이 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조전에서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 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해 한학자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밝힘.
  - 또 "문선명 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정부, 대북 수해지원 공식 제의..北 침묵(종합2보)(9/7,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측에 수해지원 의사가 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대북 통지문에서 '7일 또는 편리한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측은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음.
  
- **北 "美, 한국 주둔하려면 전면전 각오해야"(9/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우리의 전면전쟁 맛을 한 번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67년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으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최대 표현"이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조선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힘.
  
- **문형진 귀환..김정은 직접 조문 안해(종합)(9/8, 연합뉴스)**

  - 지난 3일 별세한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7남이자 장례위원장인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8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박 사장은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 교류 협력, 수해 지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측과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북한에서 평양 세계평화센터에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 요



청이 왔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밝힘.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北 연일 핵위기론 부각...美대선 겨냥 메시지인가>(9/3, 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일 '북미대화' 필요성과 '핵확산' 위협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어 주목됨. 북한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실지 행동으로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적대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역시 3일 외무성 비망록에 대해 "미국의 현 행정부는 물론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구성될 다음기 행정부도 진지하게 접수해야 할 내용들이 반영됐다"고 주장함. 신문은 이 비망록이 김정은 체제의 핵노선에 대한 '총화'를 담고 있다고 풀이하며 "더 이상 인내력을 발휘하지 말고 단호한 대항책을 취해나갈 데 대한 최종적인 검토와 책정이 있는 것을 보인다."고 밝힘. 특히 "조선의 핵 억제력 강화노선은 그 힘의 존재를 처음으로 실증한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에 이어 제2의 귀로에 들어서고 있다"며 미국의 현 행정부나 차기 행정부가 적대정책을 지속한다면 비핵화 논의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함.
- 그러면서도 신문은 이 비망록이 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암시함. 조선신보는 "비망록은 조미관계개선과 관련한 최고영도자의 의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정부가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것을 상대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함.
- 북한이 이처럼 연일 자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해 핵 위기론을 부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미 대선을 이용해 '2·29합의' 파기 이후 악화일로를 겪는 북미관계를 전환해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흥현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실험 중단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없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현재 (북미)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 다목적용이지만 실제 도발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함.



● **임성남 방중.. "북핵 대처방안 협의"(9/5, 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관한 한중간 협의를 위해 5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함.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임 본부장은 출국 직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중간 인식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유지하고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임 본부장은 6일까지 이틀간의 방중 기간에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비롯한 중국 인사들과 만나 최근의 북한 정세, 북핵 문제 동향,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이날 오후로 예정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북한 영변의 경수로 건설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 경수로 상황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임 본부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 5월 초 이후 4개월 만임. 임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방중 중인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아시아 태평양 순방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4일부터 이틀간 중국에 머물 예정이지만 방중 인사 가운데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포함되지 않음.

● **北 "국제원자력기구 정신 못 차려" 맹비난(9/5, 연합뉴스)**

-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이 발끈하며 IAEA를 맹비난하고 나섬. 조선중앙통신은 5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의 핵 활동에 개입할 자격을 상실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지금까지 다른 핵무기 보유국의 핵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없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핵 계획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공정성을 떠난 부당한 처사"라며 "우리의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에만 국한돼 있던 시기의 낡은 기준으로 오늘의 현실을 재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어 "미국의 계속되는 적대시 정책에 대처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우리에게는 비핵국가를 위주로 상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식의 기준이 따로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 앞서 IAE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해온 실험용 경수로 건설 공사가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러 외무 "6자회담 당사국들 과격행보 피해야"(9/8, 연합뉴스)**

- 북핵 문제 해결 당사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과격한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강조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날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6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이 과격한 행보를 피하고 서로에게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힘.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 확보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이에 앞서 6일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같은 노선의 송전선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등 러시아와 남북한이 기존에 합의한 3각 협력 프로젝트들을 3국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나. 미·북 관계

##### ● 美민간인 20여명 지난주 방북..산업시설 등 시찰(9/3,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의 기업대표 등 민간인 20여명을 초청, 산업시설을 비롯해 대학, 박물관, 협동농장 등을 돌아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장 이후 북한에서 개혁·개방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초청이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주목됨. 미 민간연구소 태평양국제정책협의회(PCIP)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럴드 D. 그린 대표를 비롯해 지방정부 및 기업 대표와 투자자 등 23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힘.
- 방북자 명단에는 마이클 안토노비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을 비롯해 건설업체인 미첼매디슨그룹(MMG)의 한스 다우 최고경영자(CEO), 투자업체인 아메리칸 밸류 파트너스의 리처드 지먼 대표 등이 포함됨. 이 관계자는 "대표단은 최근 북한의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방북했다"면서 "초청한 북한 당국이 승인한 일정에 따라 여행했으나 평양 외에도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함. 특히 그는 "원산과 남포항, 개성, 비무장지대(DMZ) 등도 방문했으며,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강조함.
- 대표단은 캐런 윌스텐홀름 평양 주재 영국대사를 비롯해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개발기구(UNDP), 스웨덴, 루마니아, 유럽연합(EU) 등의 외교관들도 만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함. 이와 함께 이들은 방북 기간 김일성 대학, 송도원 국제 소년단야영소, 원산농업대학,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승리조국해방전쟁기념관, 개성, 판문점, 사리원협동농장을 둘러보고 이리랑 공연도 관람한 것으로 전해짐.
- PCIP 관계자는 "이번 방문단은 정부 공식 대표단이 아니어서 미 국무부의 협조 없이 일반 경로를 통해 북한을 찾았다"고 덧붙임.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찾는 경우는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미국의 기업인 등을 대규모로 초청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함.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이들에게 많은 지역에서 산업시설과 농장 등을 시찰하도록 기회를 준 것은 새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함.

### ● 북한 독재정권, 개혁의 증거들(9/4, 워싱턴포스트)

- 김정은 정권아래, 중국은 최근에 군사력보다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북한의 외교관들과 정보원들에 따르면, 북한은 소규모 단위의 농업개혁과 미세한 자본주의의 요소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음.
- 농부들을 그들의 농작물과 시장을 통한 판매수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 변화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며 쉽게 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함. 그러나 심어 북한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김정은의 새로운 정책과 스타일에 대해 "자국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1970년대 후반의 중국의 경제 개방정책과 일부 유사하다고 평가했음.
- 북한의 잠재적인 개혁정책에 대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존재함: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는 이미 삼 대째 지도자를 배출하였고 도시규모의 노동 캠프와 핵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과거에도 경제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어왔음— 최근 10년 전부터 시장 우호적 정책을 소개해왔으나 쉽게 없어져 버림.
- 이번에는 다를지라도, 전문가들과 외부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 고립정책의 해체 또는 국가통제를 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북한의 고위급 20여명의 관계자의 야망에 달려있다고 말함. 전문가들은 정확한 답을 알려면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김정은이 8년 전에 사망한 그의 부친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몇몇의 증거들은 대부분 겉치레에 불과해 보임. 국방총은 김정이가 그의 스타일리쉬한 와이프와 함께 미니스커트를 입은 팝스타와의 공연을 즐길만큼 현대인이라는 것을 묘사함.
- 더 분명한 증거는 김정은의 발표에서 찾아 볼 수 있음. 그는 북한국민들이 배를 굶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에서 알 수 있음. 그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낡은 이데올로기의 사고방식을 꾸짖은 데서도 그의 결심을 엿볼 수 있음.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이 그의 군대식이며 고루한 아버지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음. 그러나 두달 동안의 그의 행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그의 아버지를 모셔오던 군부 강경파를 숙청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묘사할 수 있다고 밝힘.
-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불러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조짐이 없는 고착된 정책을 가진 시스템아래 있어왔습니다(김정일 정권)."라고 의회의 한국 연구분과의 선임연구원



인 스캇 슈나이더가 말함.

● <연합시론> 강경으로 선화하는 미국의 대북정책(9/5, 연합뉴스)

- 오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북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현 대통령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나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6자회담 등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으나 올해는 달라짐. 올해 민주당 정장은 국제 사회 의무를 무시하는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함. 롬니 후보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함.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거나 도발행동을 취할 경우 보상 대신에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공약함. 그는 특히 북한에 '당근'을 제공한 과거 미국 대북 정책이 실수였다고 비판하며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민간교역을 봉쇄하는 방안까지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함. 롬니 캠프는 대북 정책의 목표를 '무장 해제'로 내세우고 북한의 붕괴 후 조치까지도 언급하고 있음.
- 미국의 이 같은 대북정책 변화는 이해할만 함.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정책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임.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경쟁상대인 롬니 후보로부터 과거 4년간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호되게 받고 있는 상황임. 북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모색에 화답하기는 커녕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헌법에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구절을 넣기까지 함.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됨. 북한 스스로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고 볼 수 있음. 6자회담은 이제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회담이 돼버림.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5일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지만 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음.
- 미국의 대북 정책 강경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한미 양국은 올해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내년초 새 행정부를 출범시킴. 양국의 새 행정부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의 수위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음. 국제사회가 별 효과 없는 외교적 해법을 계속 견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지나친 대북 제재를 가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일임. 북한은 현재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음. 북한은 최근 배급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경제 관리 조치를 취함. 기업이나 국영상점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30%만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기업이나 상점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옴. 북한은 또 권력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이 중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의하기도 함. 이 같은 움직임은 획기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일 수는 있음. 그러나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문제는 핵무기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임은 자명함.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회생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 **北 "美, 한국 주둔하려면 전면전 각오해야"(9/7, 연합뉴스)**

- 오한은 7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우리의 전면전쟁 맛을 한 번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67년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최대 표현"이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조선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미국에 핵 문제의 책임을 떠넘김. 이어 "남조선 주둔 미군의 성격과 역할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지역의 군사적 패권을 쥐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실현하는 최전방 무력으로 변화돼가고 있다"며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오늘에 와서는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악성 종양으로 화하고 있다"고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또 "미국이 우리와의 평화협정체결을 한시코 반대하는 것도 우리를 적으로 계속 남겨둬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명분을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를 은근히 내비침.

다. 중·북 관계

● **北, '시양그룹 北투자 쪽박사건'에 이례적 반박(9/5, 연합뉴스)**

- 북한은 5일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양그룹에 더욱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이날 합영투자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과 분쟁과정을 파헤쳐보면 서양 집단에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이행정형을 놓고 볼 때 서양 집단에 더 치명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해석된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시양그룹이 계약이 발효된 때로부터 4년이 되도록 출자의무를 현물상 50% 정도밖에 하지 못한 점 ▲쌍방이 1단계 투자완료 시간표와 조업문제를 놓고 재 토 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시양그룹이 시제품판매대금 처리와 관련해 해당 재정관리규범 절차를 무시한 점 등을 제시함.
- 대변인 담화는 이어 "일반적으로 경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계약의 해당 중재조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고 상업적 운



리"라며 "이런 국제관례와 상업 질서를 외면하고 일부 보도매체들이 대대적인 선전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에 썩기를 박고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한 세력들의 책동에 키질(부채질)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북한은 "시대 발전의 요구와 국제투자관계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국제투자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 법준수의 원칙에서 국제투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랴오닝(遼寧)성에 본사를 둔 시양그룹은 최근 중국의 유력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등에 북한에 2억4천만위안(425억5천만원 상당)을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됨. 북한이 이처럼 북중 경제협력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그에 대한 외부의 언론보도 내용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은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 "北中, 경제특구 세금감면·비자면제 협상 중"(9/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과 나선 경제특구에서의 세금 감면과 비자 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함. 통신은 전날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의 북중 무역투자프로젝트상담회 행사를 전하면서 이런 정부당국간 협의내용도 소개함.
- 북중 양국은 지난달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황금평·위화도, 나선지구 공동 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정부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음. 중국 정부는 두 경제특구에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북한이 토지 이용과 세제 측면에서 양호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장안순(張安順) 연변조선족자치주 당 서기는 "정부인도 아래 기업이 중심이 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서로 이득이 되는 개발 원칙을 두 경제특구에 적용해갈 것"이라고 강조함. 통신은 "나선, 황금평·위화도가 이제 본격적인 발전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함.

#### 라. 일·북 관계

#### ● "日, 센카쿠·北미사일 대비 범정부 가상훈련"(9/5, 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 대비, 내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가상훈련을 벌일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함. 우선 내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2014년에는 중국이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점령한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훈련을 벌일 예정임.
- 산케이신문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내부에서 범정부 훈련의 필요성이 거론됐다며 이 훈련을 통해 자위대와 해상보안청(해경), 경찰 간 원활한 연계를 꾀할 예정이라고 전함.

### ● 北, 日공안위원장 '고노 담화 수정' 주장 비난(9/8, 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최근 일본 내각의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 겸 공안위원장이 '고노 담화' 수정 주장에 대해 "무도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피해 여성들의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하는 야만적인 처사이며 성노예 문제를 어떻게든 덮어버리려는 저열한 행위"라고 맹비난함.
- 논평은 "지금껏 표면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고노 담화의 계승이라는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전면 부정하려는 망동"이라며 "과거 죄악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일본은 언제 가도 역사와 인류 앞에 파렴치한 나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함.
- 마쓰바라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각료들 간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3일에도 "고노 담화의 수정은 국가의 자긍심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조기에 적절히 실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가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발표한 담화를 뜻함.

### 마. 러·북 관계

#### ● 북 김영남, APEC 열리는 러시아로(9/5, 중앙일보)

-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5일 도착한다고 외교 소식통이 4일 밝힘. 이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남은 APEC 정상회의(8~9일)를 전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음.
- 그의 행보엔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임. 김근식 경남대(북한학) 교수는 "2000년 푸틴이 김정일을 만날 때도 태평양 인근에서 별도로 회동했다"며 "푸틴이 상징적으로 북·러 회동을 하며 내년 김정은의 방러를 타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김영남은 8월 30~31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일엔 테헤란 대통령궁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만남.
- 이에 앞서 8월 29일자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이 APEC 정상회



의 의장국인 러시아에 참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므로 옵서버로 참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임. 하지만 APEC에 비회원국이 참가하려면 모든 회원국(21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공식 참가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정상회의가 열리는 루스키 섬(블라디보스토크에서 3km 떨어진 섬)에 김영남이 오기는 어렵겠지만 정상들이 집결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수는 있다"고 말함. APEC 정상회의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함.

- 북한은 6월 옛 소련 시절의 채무 110억 달러(약 12조원)의 90%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사업에 재투자하는 데 합의함. 현재 천연가스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바. 기 타

### ● 北, 문선명 총재 빈소에 조문단 파견 안 한다(9/6, 아시아경제)

- 북한이 문선명 총재 빈소에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음. 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전날 오후 통일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짐. 박 사장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에 조문단 파견을 요청했지만, 북측은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견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짐.
- 앞서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통일교 문선명 총재 사망에 대한 조의를 표시함. 김 제1비서는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 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해 한학자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밝힘. 또 "문선명 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문 총재에 대한 일반인과 신도들의 조문은 6일 오전 8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15일에는 장지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천성산에서 원전식이 진행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뉴스위크 독도문제 日편향 보도 논란, 한국판에 실리지 않은 이유 들어보니(9/6, 뉴스엔)

- 뉴스위크가 독도문제에 관련된 기사를 다루면서 일본 편향적인 보도를 해 논란이 되고 있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아시아판 최신호에 실린 이번 독도문제 관련 기사는 일본 우익의 관점과 뉴스위크 일본판 편집장인 요코다 다카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왜 일본과 한국은 바위무더기 때문에 다투는가.'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한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함. 또 제목과 부제목에 '폭주하는 한국',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회로'등 자극적 문구를 삽입하기도 함.

- 요코다 뉴스위크 일본 편집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주장함. 또 토머스 시퍼 전(前) 주일 미국대사가 한국인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한국이 정신나간 짓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비판한 발언을 소개함. 요코다 편집장은 한국병합 5년 전인 1905년부터 일본 땅이었으며 한국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점령해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함.
- 그러나 뉴스위크 코리아는 해당 기사가 정확한 보도와 거리가 있어 한국판에는 해당 기사를 신지 않았다고 설명함. 뉴스위크 한국판인 뉴스위크 코리아는 해당 기사를 신지 않는 대신 서정현 편집장의 '우리가 독도 기사를 신지 않은 이유'라는 견해를 실음. 서정현 편집장은 이 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독도 문제에서 한국이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기사의 주요 골자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독도를 영토문제로 '쿨'하게 다루는데 한국은 민족자결을 상징하는 성지라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는 주장이다"며 "마치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칼로 찢어 놓고 찢린 사람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모르겠다는 투였다"고 말함. 이어 "일본의 우익이 반길 만한 논조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와는 거리가 있는 사실 왜곡이었다. 그러나 제호만 나눠 쓸 뿐 뉴스위크 일본판은 뉴스위크 한국판과는 무관한 잡지다"고 분명히 함.
- 서정현 편집장은 "문제는 뉴스위크 아시아판이 이번에 표지기사로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뉴스위크 일본판 표지기사의 시각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있다"며 "독도 문제에서 미국의 공식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중립이다. 그러면서 한일양국에 자제를 요구한다면 결국 한국을 침략한 일본을 편드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주장도 있다. 그런 마당에 뉴스위크 아시아판은 한국의 시각을 반영하지 않고 일본에 지극히 우호적인 시각으로 독도 문제를 보도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함. 서정현 편집장은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토분쟁을 벌인다. 미국의 뉴스위크는 앞으로 이 영토 문제도 일본에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도할 생각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뉴스위크 한국판이 아시아판의 표지 기사를 번역해 신지 않기로 한 이유다"고 비판함.

● **韓·美, 미사일 막판 힘겨루기... 정부 '가이드라인 폐기' 배수진(9/6, 문화일보)**

- 한·미 양국은 '2001년 미사일 지침'개정협상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짐. 정부는 미사일 협상에서 관철해야 할 '마지노선'을 통첩하면서 미국을 압박해 사거리와 탄두중량과 관련된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전략을 가다듬는 기류임. 그렇잖아도 중국이



이번 한·미 간 협상에 우려를 갖고 있는 터에 최근 일본이 '사거리 연장 반대' 입장으로 간섭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동북아 관련국 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더 이상 비화하기 전, 최소 10월 중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임.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및 탄두중량 증강 측면뿐 아니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제·조기 감시정보 체제 구축의 포괄적 틀에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정부가 설정한 최소한의 목표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현행 300km에서 최저 600k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임. 정부는 당초 목표치인 800km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일정 양보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제안했던 사거리 550km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탄두중량 역시 현행 500kg에서 원래 목표한 1000kg으로 늘릴 수는 없더라도 700kg 안팎 수준은 돼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이 동북아 정세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종의 배수진임.
- 정부가 포괄적 틀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제 아래서도 탄도미사일에 우선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탄도미사일이 일거에 군사력 변화를 야기하는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임. 박창권(정치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정책연구' 여름 호에서 이 같은 탄도미사일이 발휘하는 효과와 관련 "기습공격 능력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심리적 충격과 공포감으로 전략적 활용 효과가 높으며, 저가의 비용으로 군사력 균형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함.
- 탄도미사일 협상이 가져올 단기적 효과 외에 한·미 양국은 대북 감시정보체제, KAMD 구축 방안 및 미국 미사일방어(MD)와의 연계 방안을 놓고서도 줄다리기를 벌여 오고 있음.

#### ● **李대통령, 클린턴 접견.. "대북 긴밀 공조"(9/9,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이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신지도부가 비핵화 및 민생개선, 경제회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된 원칙하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함. 이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또 이란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함.
- 양측은 특히 한미가 지난 4년간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상의 동맹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함.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음. 이번 접견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짐.





## 나. 한·중 관계

### ● 천즈리, 韓국회의장 회견... 중한의회 회의 참석(9/5, 인민일보)

- 한국을 방문 중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천즈리(陳至立) 부위원장은 4일 서울에서 강창희 한국 국회의장을 회견함. 아울러 이병석 부의장과 중한의회 정기교류체제 제7차 합동회의를 공동 주최함.
- 천즈리 부위원장은 중한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중한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발전했다고 말함. 또한 올해는 수교 20주년으로 중한 우호교류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이 새로운 역사적 기회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이 이를 계기로 중한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전함. 그리고 중한 의회 교류는 양자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중국 전인대는 한국국회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정기교류체제를 장기화하고 더욱 공고히 하여 양국은 물론 양국 의회 관계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회의에서 양측은 중한관계, 동아시아 지역 협력, 한반도 정세 그리고 국제 및 지역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음. 중국 전인대와 한국국회는 2006년 1월에 정기교류체제를 수립했고, 매년 한차례 양국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 <李대통령, APEC서 후진타오와 '비공식 회담'(9/8, 연합뉴스)>

- 한국을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풀 어 사이드 미팅(pull aside meeting · 비공식 회동)'을 함.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APEC 회의 제1차 세션 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후 주석과 5분간 '비공식 회동'을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반가운 기색을 보이자 후 주석이 이 대통령을 포옹함.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윈난성(雲南省) 지진 피해와 관련, "지진 피해가 커서 걱정"이라며 "빨리 피해가 복구됐으면 한다. 중국 국민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말함.
-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지진 내용을 설명한 뒤 "지금 이재민이 75만 명이 생겼다"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하고 반갑다"고 화답함. 앞서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통해 "윈난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저와 우리 국민은 중국 국민과 한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지진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그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부연함.
-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비공식 회동은 한-중 양국이 각각 권력교체기를 맞아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짐. 이 대통령은 내년 2월25일 퇴임하며, 후 주석은 연내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국가주석직을 시진핑(習



近平) 부주석에게 물려줄 예정임.

- 이 대통령은 이어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다 총리와 악수를 한 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다 총리와는 악수와 함께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해보겠지만 현재까지 정상회담이나 한-일 외무장관 회담 제의는 없었다."면서 "노다 총리와는 따로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 간 외교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통령이 노다 총리와 따로 만나 특별히 나눌 얘기가 없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임.

#### 다. 한·일 관계

##### ● 한국 정부,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문 채택(9/3, 산케이신문)

- 한국 국회는 3일의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시마네현·타케시마(한국명·독도)의 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와 구일본군의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를 각각 채택함.
- 타케시마에 관한 결의에서는, 타케시마는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함. 일본 정부에, 방위 백서나 외교 청서에서 타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한 기술을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한 것 외에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영유권의 주장에 일관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요구함.
- 위안부 문제의 결의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함.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의 장애가 된다고 지적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여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도록 요구함. 양결의안은, 8월 하순의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됨.

##### ● 차가워지는 일한, APEC에서 예정된 수뇌·외상 회담은 없지만 학생 교류는 실시 (9/3, 산케이신문)

- 한국 외교부 보도관은 4일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APEC)에서의 일본과 한국 수뇌부나 외상간의 회담은 예정되지 않다고 말함.
- 보도관은 "현재(일한) 쌍방에서(회담 개최의) 제기는 없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예측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도 말해 양국 수뇌가 접촉할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피함. 한편 보도관은, 회견 첫머리에서, 정례의 일한의 대학생 교류를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밝힘. 이번 달 8~21일의 일정으로 한국으로부터 학생 30명이 도쿄의 외무성과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를 방문하며, 일본학생들은 10월에 한국을 방문함.



그는"차세대 우호 관계 증진"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함.

● **日, 독도방어훈련 항의..정부, 일축(9/7,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7일 우리 정부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함.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과 약 1시간 가까이 면담함.
- 일본 측은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에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전달했으며 우리 측은 이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짐. 구라이 총괄공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감. 그러나 이날 면담은 통상적인 외교채널간의 접촉이어서 일본이 항의서한을 전달하지는 않았고 양국 간 갈등을 잘 해결해 보자는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해짐.
- 우리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부터 독도에 불법 기습 상륙하는 외국인 과 선박을 저지·퇴치하기 위한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함. 일본은 지난 달 31일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의 독도 방어훈련 방침에 항의함.

라. 미·중 관계

● **외교부, 남중국해 문제에서 "美측 언행일치하길"(9/5, 인민일보)**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연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여러 차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미국 측은 언행일치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한 일이 아닌 유리한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밝힘.
- 홍 대변인은 남중국해 문제는 하나의 복잡한 개념으로 각국의 이해와 관심 분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자국 이익에 대한 이해 또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중국 측은 남중국해 문제의 핵심을 중국 난시군도의 일부 산호초가 점령당함에 따른 영유권 분쟁과 관련 해역 해양권 다툼으로 보고,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영토와 해양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함.

마. 미·일 관계

● **美 수직이착륙기 또 사고..일본내 갈등 심화(9/9, 연합뉴스)**

- 미국 수직이착륙기가 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10월 일본내 본격 운용을 앞두고 긴장이 커지고 있음.
- 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군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 MV-22기가 6일 오후 5시께(현지시각) 미국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잭슨빌 시가지에 긴급 착륙함. 착륙한 장소는 원래 착륙해야 할 비행장에서 약 5km 떨어진 교회 옆 공터였음. 부상자나 기체 손상은 없었음.



- 미 해병대는 "조종사가 곧바로 기지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경고등이 켜진 걸 보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착륙했을 뿐"이라며 간단한 트러블일 뿐 대단한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함. 군 관계자는 기체에서 짐은 연기가 나온 이유는 연료가 새어나온 뒤 기체의 가열된 부분에 닿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함.
- 일본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고가 난 기종이 아마구치현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일시 대기 중이고, 10월초부터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普天間) 기지에서 본격 운용될 주일미군 해병대의 수직이착륙기와 동일 기종이기 때문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만나 "(오스프리의) 안전성에 대해 (일본 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사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10월 초부터 본격 운용에 이해를 구함. 일본 정부는 애초 지난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오스프리 추락 사고 등에 대해 "기체에는 결함이 없었다"고 정리한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10월 운용에 대해 국내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었지만, 또 사고가 발생하자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음. 일본에서는 9일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해변 공원에서 오스프리 배치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음.

####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2018년까지 제작(9/4, 뉴시스)
  -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가 오는 2018년까지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제작할 계획에 대해 공표함. 3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전략 미사일부대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사령관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함.
  - 새롭게 개발되는 미사일은 지난 1970년대 개발 및 제작돼 노후화된 R-36 M2 Voyevoda 미사일을 전격 대체하게 되고, 대함 미사일 불라바(Bulava)와 대지 미사일인 Topol-M과 Yars도 이에 포함됨. 최신예 고체 추진제 3단 미사일 불라바는 10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러시아군은 18차례의 실험 가운데 7번 성공함.
  - 러시아의 이러한 신형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됨.

#### 사. 일·러 관계

- 中, 日측 댜오위다오 '국유화' 의도 "부질없는 짓"(9/4, 인민일보)
  -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釣魚島) '소유자'에게서 '구매'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일 연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댜오위다오에 대해 취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불법이자 무효한 것으로 중국 측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힘. 또한 일본 측이 소위 '국유화'를 통해



불법적 입장을 고수하려는 계략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덧붙임.

-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오위다오와 인근 도시는 예부터 중국 고유 영토이며,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양자 간 범위를 넘어서도, 제3자 국가의 이익에 해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함.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오위다오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힘.

● **北京경찰, 日대사관차량 국기도난 사건 조사결과 발표(9/5, 인민일보)**

- 베이징 경찰 측은 4일 주중 일본대사관 차량 국기 도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2012년 8월 27일 오후, 주중 일본대사 차량이 베이징 시 동북사환(東北四環) 도로를 주행하는 중에 일반차량에게 저지당한 후 대사관 차량에 걸려 있던 일본 국기를 도난당한 일이 있었음. 사건 발생 후, 베이징 경찰 측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8월 29일 오후 허베이 창저우(滄州) 지역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함.
- 경찰 측은 조사 결과, 국기를 빼앗아 달아난 두 명의 남자는 귀(郭)모모(남, 23세, 허베이성 사람) 씨와 샤(夏)모모(남, 25세, 헤이룽장성 사람) 씨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모두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다고 전함. 베이징 경찰 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귀모모, 샤모모 씨에게 행정적 구류처분을 내렸고, 당시 차를 몰고 지나가던 류(劉)모 씨도 대사관 차량의 정상적 운행 방해죄로 공안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음.

아. 중·러 관계

● **중·러 정상, APEC 계기 별도회담 개최(9/8, 연합뉴스)**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함. 두 정상의 회동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임.
-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지만에 합의했다고 보도함. 통신은 후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정치적 신뢰 제고, 투자협력 강화, 첨단기술 교류 확대, 사법 분야 협력, 양국 군 관계 증진,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을 담은 7가지 제안을 했다고 전함. 후 주석은 특히 양국 간 에너지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러시아와 서(西) 시베리아에 해당하는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 북서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서부 노선'을 통한 가스 공급 방안을 수년째 협의 중임. 푸틴 대통령은 "항공, 우주, 천연가스, 핵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하고서 "러시아는 중국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회답함. 두 정상은 시리아 사태와 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자. 일·러 관계

##### ● **日총리, 12월 방러..쿠릴4개섬 교섭 기대(9/9, 연합뉴스)**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2월에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해 일본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교섭이 진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기 시작함.
- 9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로 양자 회담을 열고 12월 방러에 합의함. 노다 총리는 회담 후 자국 취재진에 "(푸틴) 대통령과 다시 논의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양자회담에서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제반 문제를) 조용한 분위기에서 해결하길 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또 10월 차관급 협의를 개최한다는 데에도 합의함. 이후 11월에는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임. 러일 양국은 정상회담에 맞춰 오후츠크 해의 게 밀어·밀수 방지 협정을 체결했고,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의 액화 천연가스(LNG) 공장 건설에 일본 기업의 참가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교환함.
- 한편 야당과 '가까운 장래에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약속해 10월 해산 가능성을 시사한 노다 총리가 12월 방러에 합의하자 일본 야당은 "총리가 사실은 국회를 해산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차. 기 타

##### ● **한-러, '남-북-러 가스관' 사업 긴밀 협력키로(9/8,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남-북-러 가스관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이날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러시아 대통령으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임.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남북문제 해결이 러시아 극동 개발과 한-러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뿐만 아니라 다자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특히 양국 간 인적교류와 양국 진출 기업·파견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양국 간 합의된 시증면제협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키로 함. 두 정상은 또 경제·과학기술 협력,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등 3각 협력, 우주협력, 극동 시베



리아 개발협력 등 양국 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 협력을 강화키로 함. 이와 함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 실질 협력 증진 등을 위해서도 북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함.

- 두 정상은 이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합의와 의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키로 함.

● **대만, дя오위다오 인근섬 국가공원 지정 추진(9/9, 연합뉴스)**

- 대만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дя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자국 관할의 북단 섬들을 국가해양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대만 정부는 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9일 전함.
- 국가해양공원에는 핑자위(彭佳嶼), 화위(棉花嶼), 화핑위(花瓶嶼) 등 북방 3개 도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이들 섬 가운데 가장 큰 핑자위는 북부 지룽(基隆)에서 55km, дя오위다오에서 141km 각각 떨어져 있음. 북방 도서 국가해양공원 지정안은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7일 공군 헬기 편으로 핑자위를 방문, "дя오위다오는 대만의 부속 도서"라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것임. 당국은 서해안 핑후(澎湖)섬 일대에 대한 국가해양공원 지정 일정도 앞당길 예정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